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983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63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2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1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14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19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22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2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10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428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11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38호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4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39호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40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41호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4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63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 11. 10.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97-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 명 칭: 인천 그린 에너지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50,747.0㎡
 - 1구역 = 4,589.8㎡(남측 사면부지)
 - 2구역 = 46,157.2㎡(액화수소 생산설비 설치부지)
 - 구역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구 역 면 적	4,589.8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50,747.0㎡)중 남측사면부지 해당

※ 가스공급설비 남측부에서 추진중인 대로1-78호선 개설, 개발행위허가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면재해 발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공사계획진행을 위한 사면부 절토 우선 추진

· 규 모

구 분	면 적(㎡)	비 고
건축 연면적	-	남측사면 절토를 위한 부지정지
공작물 면적	-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아이지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경열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실시계획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3. 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1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 11. 5.

인천광역시장

☐ 변경등록 사항 : 소재지 및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단 체 명	변 경 사 항			주 관 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09-0 -인천광역시 -19호 (2009.4.1.)	인천서구외국인 사회복지센터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 88(석남동)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 98, 304호(석남동)	가족다문화과
		대표자	김수현 (58.5.15.)	민신홍 (82.3.2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1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금영이엔텍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31호)	김영중	2005. 6. 28.	기술인력 변경	이유신 [대기환경기사] [해임]	이도진 [대기환경산업기사] [선임]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19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 11. 10.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문학경기장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문학경기장 근린생활시설(주6, 주7동) 설치 사업(용도변경)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432,034.6㎡(문학경기장) 중 864㎡
- 규 모: 근린생활시설 2동(주6: 624㎡, 주7: 240㎡ / 연면적: 1,896㎡)

위치	기정		변경		비고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주6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351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73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624	
주7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40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40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68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 사업기간: 2021. 3. 15. ~ 2021. 10. 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22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내 무단점유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대 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1. 10. ~ 2021. 11. 24. (14일간)
3. 공고사유 :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송달불가능)
4. 공고대상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수 량	대집행 방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08-2	스케이트 관련 시설물	4개소	방치 및 무단점유 중인 사유시설물 철거

5.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영장(별첨)

- 무단점유 지장물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합니다.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032-420-27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물 사진 1부. 끝.

붙임

현황사진

1. 벽천분수대 부근 시설물 2개소



2-1. 자전거 보관대 부근 시설물 2개소



3. 위치도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2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9.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단체명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주관부서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인천지부 (2000-0-인천광역시-94)	단체명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인천지부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인천광역시지부	보훈과
	대표자	김 홍 준	박 만 조	
	주요사업	월남참전에 대한 정의와 대국민의식 계도	고엽제관련자 복지증진 및 명예선양사업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428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적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1.11.9.~2021.11.24.(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1년 11월 30일까지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부과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차량	체납본세	반송사유	비고
1	000250	허*재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속골로88번길 46, 608동 802호 (도화동, e편한세상도화6-1단지)	2021.4.30.13:44	서구 오류동 거점로 이동1반	축하중 1.75톤 초과(3축하중 11.75톤)	경기06 초6843	500,000	반송(폐문부재)	
2	000272	김*영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청수14로 29, 207동 1501호 (청당동, 버들마을)	2021.5.14.14:00	서구 오류동 원당대로 이동2반	폭 0.70미터 초과(총폭 3.2미터)	강원98 바7070	1,000,000	반송(폐문부재)	
3	000309	오*건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상삼3길 16	2021.6.11.13:55	중구 향동 인종로 향동과적검문소	축하중 1.02톤 초과(5축하중 11.02톤)	부산99 바6987	500,000	반송(폐문부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38호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의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육성을 통한 예술성 발전과 시민의 인성 함양 도모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서예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서예 관련 교육 및 재정지원과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라. 서예진흥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 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5, 팩스 032-440-8764, 이메일 johyer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붙임1)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진흥 사업)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3.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서예교육 지원) 시장은 서예 관련 기관·단체 및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과 이와 관련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서예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예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제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p><input type="checkbox"/>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지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법령·제도의 개선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⑤ 그 밖에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

은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7조(재정지원) 및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은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진행가능한 사업으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중 서예분야 지원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사업명	지원액	사업명	지원액
계	3건	67,000	3건	70,000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인천광역시 서예대전 (일반부, 학생부) 및 작가전	45,000	인천광역시 서예대전 (일반부, 학생부) 및 작가전	46,000
	제27회 韓.中 서예국제 교류전	10,000	제28회 韓.中 서예국제 교류전	12,000
	제11회 글사랑 문자전	12,000	제12회 글사랑 문자전	12,000

* 인천시 소재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지원 가능함.

*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예산 : 2020년 1,350백만원, 2021년 1,550백만원

4. 작성자: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39호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략산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전략산업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 청문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전략산업육성사업과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기반시설의 공급, 기업 유치에 따른 지원, 지방세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9.(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8765, 이메일 yacobb@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경제 발전을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중추적으로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 기술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이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
5.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6. 그 밖에 시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제6조(우선순위 결정 및 청문) 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전략산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특성, 산업입지 및 환경여건, 성장잠재력, 고용유발 및 산업과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시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략산업의 추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년마다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2. 시 산업입지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 시책
5. 주요 추진사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나 시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연구기관·법인에 의뢰하여 전문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전략산업육성사업)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신사업 기획 및 연구
3. 국제 공공 연구개발 및 협력
4.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5. 해외 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마케팅 활성화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시장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기업 또는 기관(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이 관내에 본사·사무소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입지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옥외공간의 정비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략산업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의 본점(이하 “기업 등의 본점”이라 한다)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 등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세 감면)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과 「인천광역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전략산업에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채사항

관련 법령	<input type="checkbox"/>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input type="checkbox"/>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div>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

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광역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전략사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용역을 통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타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용역을 통한 수립한 시도가 있는 반면, 관련 사업내에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도도 있음

※ 타시도 사례 : 용역 2개 시도, 국비 연계사업 2개 시도, 타 사업 연계 추진 1개시도, 비예산 1개시도(테크노파크 활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항 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상의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타시도 최근 평균 사례를 살펴보면 약 2억 1천만원(강원 1억 7천, 경남 2억 5천)
- 또한 별도의 용역 수립을 수행하지 않고 관련 연구기관 협조를 통한 종합계획 수립도 가능함.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장 전유도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40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수도권매립지가 소재한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캠핑장 관리·운영의 위탁 주체에 민간을 포함(안 제4조)
- 나. 시설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서구 주민을 추가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19.(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8765, 이메일 iamng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을 “관리·운영하는 자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기관,”로, “공공기관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를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수탁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설을 대행 또는 위탁받아 <u>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u> 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u>관리·운영하는 자를</u> ----- -----.
제4조(관리·운영)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u>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u> <u><신 설></u>	제4조(관리·운영) ① ----- ----- <u>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기관,</u> ----- ----- <u>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수탁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정한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 ----- -----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 시설은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노지캠핑장(미니멀캠핑장)에 한한다.

1. (생략)

2. 100분의 30 감면

가. ~ 라. (생략)

<신 설>

3. (생략)

② ~ ④ (생략)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자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div data-bbox="453 689 1007 741"><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div> <div data-bbox="475 772 963 817">○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div> <div data-bbox="453 909 758 960"><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div> <div data-bbox="475 992 793 1037">○ 제136조(사용료)</div> <div data-bbox="475 1066 1037 1111">○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div> <div data-bbox="743 1288 1083 1332">“내용은 별지 작성”</div>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8. 12. 26.]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
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발생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환경국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41호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가. 노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같은날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에 따른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 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거법령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안 제1조 등)
- 나. 「미세먼지법」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 다. 같은 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 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19.(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8765, 이메일 iamng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다.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를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를 각각 “대기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및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28조의2”를 “특별법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를 “대기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특별법 제25조제1항”을 “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를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 조치기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인천광역시 등록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특별법 제28조의2”를 “특별법 제29조”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가 같은 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8조의2”를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및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u>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u>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을 말한다.</p> <p>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또는 특별</p>	<p>제1조(목적)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 ----- ----- -----.</p> <p>제2조(정의) ----- -----.</p> <p>1. ----- ----- ----- ----- <u>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u>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p> <p>2.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및</p>

법 제27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인
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해차량 제한지역 안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없거나 인증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

----- 대기법 제60조-----

--.

4. -----

----- 대기법 제60조-----

-----.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①

--- 특별법 제29조 -----

----- 대기법 제60조 -----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2. (생략)

3.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신 설>

제6조(인천광역시 등록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등록차량이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을

-----.

1. 특별법 제26조제1항 -----

2. (현행과 같음)

3.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 --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 조치기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위반한 경우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6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8조의2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 특별법 제29조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가 같은 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9조

-----.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input type="checkbox"/>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대기환경보전법」 <input type="checkbox"/>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변경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수도권지역"이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변경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3.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

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변경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서울특별시장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와 제2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기 관리 권역)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 관리 권역은 별표 1과 같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삭제

제26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①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

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1.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비용 미발생 예상으로 미첨부

4. 작성자 :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라 덕 균